

# 장례식에 '경찰' 비옷 착용, 단순 실수 아닌 법적 문제

최근, 운남성 위신현 린봉진의 한 촌민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경찰' 글자가 새겨진 비옷을 입고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 1. 현지 통보: 린건조사!

5월 13일, 운남성 위신현 린봉진인 민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5월 5일, 룡당촌 촌민 좌모가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던 중 폭우가 내렸다. 좌모는 마을 주민 황모로부터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찰' 글자가 새겨진 비옷 20벌을 빌렸다. 현재 공안기관은 이미 린건하여 조사처리했다.

## 2. 경찰제복과 유사한 비옷, 온라인서 '암암리에 판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찰제복과 유사한 디자인의 비옷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경찰' 글자가 인쇄된 비옷으로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공식 검색하면 검색되지 않는 반면 '법규보호' 등의 명칭으로 일부 판매되고 있다. 관련 업체는 "'경찰' 글자가 새겨진 방호복은 오로지 공안부문에 납품하며 기타 주문서는 회사의 명의로 구매해야 하지만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판매자는 플랫폼 감시를 피하기 위해 '경찰' 두 글자 대신 '#' 기호를 사용해 암묵적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생성 만화

해당 제품의 가격은 수십원에서 수백원까지 다양하며 일부 경찰 증명을 요구하는 판매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제후 즉시 배송'이라는 원칙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 3. 경찰제복 불법 제조 판매 시 형사처벌

중앙재경대학 법학원 교수이며 중국법학회 민법학연구회 리사인 주요 봉은 <인민경찰법>과 <형법>, <인민경찰 제식 복장 및 표지 관리규정>

은 경찰제복 모조품의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해 모두 전문적인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인민경찰법> 제 36 조는 인민경찰의 경찰 표지와 제복, 경찰용 장비는 공안부에서 통일적으로 감독 제작하고 기타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관리하는바 기타 개인 또는 조직은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인민경찰 제식 복장 및 표지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조한 경찰복 또는 표지를 착용할 경우에는 시정 및 벌금을 부과하며 경찰제복과 비슷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장 또는 표지를 생산, 판매할 경우에는 경고 혹은 5,000 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용 제복과 표지를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했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불법 물품을 몰수하고 단위 또는 개인에게 구류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4. 경찰 신분에 대한 대중의 혼동을 초래해 집법 권위 손상

촌민들이 '경찰' 글자가 새겨진 비옷을 입은 것은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 신분에 대한 대중들의 혼동을 초래하여 집법의 권위성을 손상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심사체계에 허점이 존재하고 감독관리부문의 순찰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경찰복은 인민경찰의 전용 제식 복장으로 인민경찰 신분의 중요한 표징이자 인민경찰 형상의 중요한 구현이다. 이와 관련된 엄격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하면 공공질서의 교란 등 위법행위가 만연될 뿐만 아니라 경찰 이미지에 손상되고 더우기 집법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들의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혼란한 현상을 타파하려면 다방면으로 협동하여 힘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네티즌들에 대한 법률보급 교양, 플랫폼에 대한 순찰감독관리와 관련 부문의 집법 강도를 강화하여 집법의 권위와 사회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CCTV 넷

## 10 여만원 사치품 주는 연길 여성 변장까지 했건만...



최근, 연길 시민 왕모는 퇴근후 전동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에게 귀중한 장신구 사치품을 전하러 가던 중 길에 울퉁불퉁하여 사치품과 중요한 자료가 저장된 휴대폰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그만 떨어뜨렸다. 이에 연변주공안국과 연길시공안국은 연합으로 4 일 만에 왕모의 분실물을 찾아주었다.

왕모는 "위급한 순간에 실력 발휘, 인민경찰 인민을 위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기를 연길시공안국에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달 24 일 저녁, 왕모는 퇴근길에 10 여만원 상당의 어머니의 사치품과 업무용 휴대폰을 손가방에 넣고 전동자전거를 타고 어머니네 집으로 향했다. 20 분후 집앞에 도착해 내려리던 그는 자전거 발판에 놓아두었던 손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손가방에 어머니의 금, 다이아몬드 사치품과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저녁식사후 야간근무를 하려고 가져간 것인데 안에 든 자

료를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왕모는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손가방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경찰과 보조경찰들은 왕모가 지나온 길을 따라 수색을 시작했다.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왕모가 공사 구간을 지나갈 때 발판에 있던 손가방이 떨어지는 장면과 얼마후 한 중년 여성이 손가방을 찾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여성은 손가방을 주는 후 곧장 자리를 뜨지 않고 모퉁이에 가서 가방을 다른 '포장'으로 바꾼 후 옷을 두번씩 갈아입으며 변장하고 나서 연길 시내를 한나절이나 돌아다니다가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까지 가서 모습을 감추었다.

연변주공안국 빅데이터실전중심의 지원 아래 경찰들은 추적과 수사 끝에 마침내 손가방을 주는 여성을 찾아냈고 왕모는 분실물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다. /리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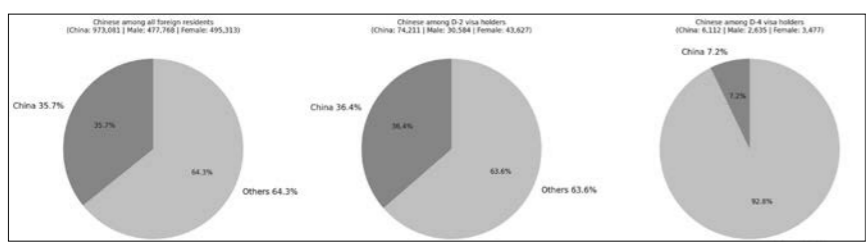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 한국에서 범죄 저지른 중국류학생, 귀국해도 법적책임 피할 수 없어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월 31 일 기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인 총 272 만 2,108 명이다. 그중 중국 국적자는 97 만 3,081 명 (남성 47 만 7,768 명, 여성 49 만 5,313 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 한국내 외국인중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필자 역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류학생으로서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연구 및 법률 연구를 수행하는 10 여년 동안 여러 건의 중국 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을 접했다. 이들 사건중에는 한국 법률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전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류학생들이 범행후 한



/ 대한민국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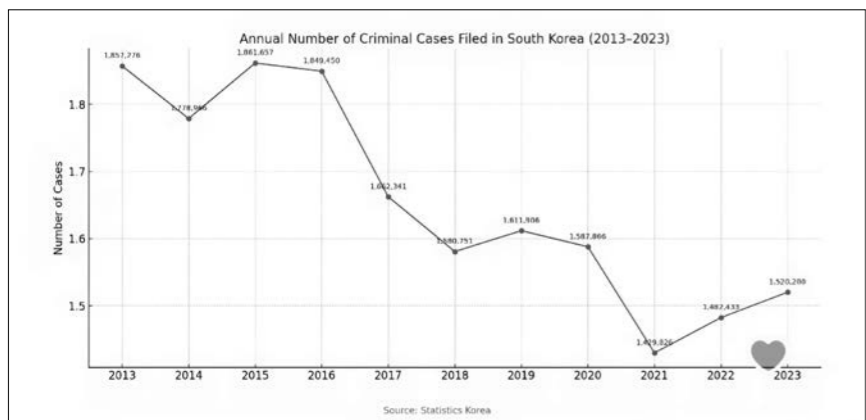
류학 (D-2)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류학생은 총 7 만 4,211 명 (남성 3 만 584 명, 여성 4 만 3,627 명)으로 전체 D-2 비자 소지자 (20 만 4,074 명)의 36.4%에 해당한다. 일반연수 (D-4) 비자 소지자는 총 8 만 5,189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6,112 명 (남성 2,635 명, 여성 3,477 명)으로 7.2%를 차지한다.

국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몰래 중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을 통해 한국에 체류중인 더 많은 중국류학생들이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해외 류학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앞길을 흐트러지는 일을 겪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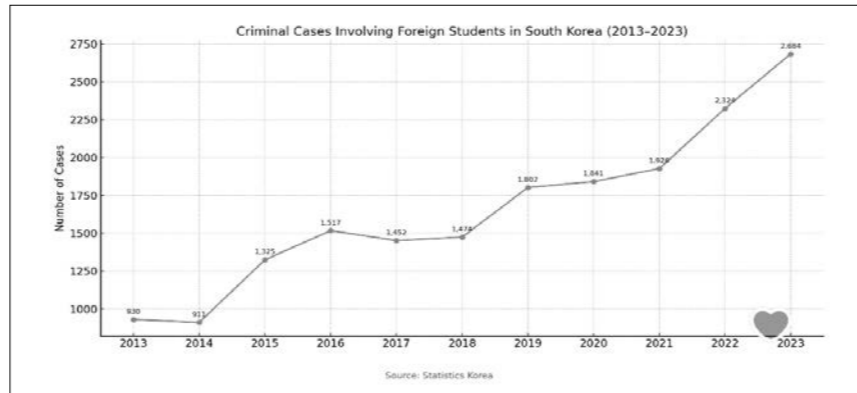
## 한국내 외국인 류학생 범죄를 10년간 3배 증가

## 한국 경찰청 형사사건 접수 현황 (2013년-2023년)



/ 대한민국 통계청

## 외국인 류학생 형사사건 접수 현황 (2013년-2023년)



/ 대한민국 통계청

상기 두개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한국 전체 형사범죄 접수 건수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국인 류학생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총 185 만 7,276 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52 만 200 건으로 줄어 전체적인 치안 상황의 개선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국인 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은 2013년의 930 건에서 2023년에는 2,684 건으로 3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법규 준수에 있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외국인 류학생 형사사건 주요 범죄유형 순위 (2013년-2023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경찰이 접수한 외국인 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은 총 1 만 5,486 건에 달하며 주요 범죄유형은 교통범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및 성범죄 등이다.

특히 교통범죄는 4,105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절도 2,538 건, 사기 2,053 건 등 재산 범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도 3,000 건을 넘는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성범죄

도 850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마약범죄, 공중보건 관련 범죄, 특별경계범죄 등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체류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법 교육과 예방적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재한국 중국류학생 해외 불법행위 멀리해야

앞서 소개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대표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중국에 귀국한 후 법적책임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출국했다가 귀국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국가의 사법 주권과 법의 존엄은 어떤 도피나 요행심리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법을 두려워해야 할 리유는 처벌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감의 표현이며 해외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리현 (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 연구생)



## 조심! 대학입시 수험생 겨냥한 사기 메시지 극성!

9 일, 대학입시가 한창인 가운데 대학입시 수험생들을 겨냥한 전신사기극이 극성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길림성교육고시원과 장춘공안선전, 장춘반전신네트워크사기센터 등은 9 일 자체의 워렛 공식계정을 통해 대학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특별한 주의보를 발송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입시 수험생들은 이른바 '길림성교육고시원'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발송해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기사가 확인한 데 따르면 길림성 장춘시, 길림시 등으로 현시된 핸드

폰으로 발송되었다는 메시지 내용은 "시험 과정에 AI 시험 감독관에 의해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성적이 0 점으로 기록됐다."였다.

이에 대비해 9 일 길림성교육고시원은 고시원의 워렛 공식계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중히 알렸다. "이것은 전형적인 문자 사기이다! 교육 담당부서와 전형 (招考) 기구는 이런 정보를 수험생에게 보내지 않는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은 개인 정보를 잘 보관하여 속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만약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더라도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유경봉기자



## 아환 (북경) 국제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지사 공중예금 불법유치사건에 관한 통고

아환 (북경) 국제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지사의 공중예금 불법유치 범죄활동 (非法吸收公众存款的犯罪活动) 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국가 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사건 피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모금 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아환 (북경) 국제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지사의 공중예금 불법유치사건과 관련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반드시 2025

년 6월 30 일전에 본인의 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서, 은행카드 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를 찾아 신고 등록하기 바란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권리를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계인: 장경관 (17604430113) 석경관 (19843391607)

연길시공안국 2025년 6월 12일

